여수광양항·목포항, 아시아 최고 항만 육성

광양항 3-2단계 컨부두·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개발 등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11개 사업 1조7464억원 반영

정부가 수립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목포항과 여수광양항 개발 사업비 1조7464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정부 계획을 근거로 관련 사업비 확보에 나서 목포항과 여수광양항이 아시아 최고 항만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목포항과 여수광양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국내외 해운항만환경변화를 고려해 제4차 항만 기본계획(2010~2030)을 수립해왔고 이날 최종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연내 고시될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는 목포항과 여수광양항 관련 11개 사업, 1조7464 억원이 반영된다. 목포항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2180억원, 목포항 국제카페리 부두 건설 480억원, 목포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138억원 등이 반영된다.

목포신항은 한국형 뉴딜사업인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부두 1선석 (철재 부두 3만t)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배후단지 (23만8000㎡) 개발로 풍력발전기 조립·생산·이송에 필요한 배후단지 등이 조성된다. 목포 내항도국제카페리 부두(3만t급 1선석)와 국제여객터미널, 화물야적장, 주차장이 신축된다.

또한, 수협 등 15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북항은 왕복 4차로 진입도로 910 m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다.

국내 부동의 1위 무역항 여수광양항 관련해서는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개발 (5940억원) ▲낙포부두 리뉴얼(1596억원) ▲광 양항 내부순환도로 개설(1900억원) 사업이 반영됐다. 또한 ▲광양항 북측항만 배후단지 개발 (238억원) ▲광양항 제3 투기장 전면 항로 준설 (1903억원) ▲묘도 항로 준설(1379억원) 사업 등이 반영돼 여수광양항 활성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

특히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자동화 부두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낙포부두는 3선석(730m)을리뉴얼해안전성을

확보하고 체선율(滯船率·입항선박 중 접안을 위해 12시간 이상 대기한 선박 척수 비율)을 낮출 계획 이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와 율촌 1산단간 순환 도로 개설을 통한 수송 거리 단축(16km→2.6km)으로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방침이다.

광양항 제3투기장 전면항로 및 여천 묘도를 준설을 통한 대형선박 항로 확보 등으로 현재 평균 29%인 부두 체선율을 완화하고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은 "제4차 항만 기 본계획에 반영된 국비확보를 통해 목포신항은 동 북아 물류거점과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전남형 일 자리 창출 창구로 발전시키고, 여수광양항은 수출 입 물동량 세계 10위의 항만물류 1번지로 만들겠 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여수광양항과 목포항 개발 사업비 1조7464억원이 반영되면서 이 두 개 항만이 아시아 최고 항만으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사진은 광양항(왼쪽)과 목포 신외항 전경.

광주·전남 행정통합 방안 나온다

연구 용역 내년 1월 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내년 1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전남도, 광주전 남연구원은 최근 공동 연구용역 준비를 위한 첫 실 무회의를 열고 용역 진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광주시는 연구원측에 '시·도 행정통합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대구·경북의 기본 구상·계획 용역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구했다.

전남도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률안 등 대안을 마련해 시·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과물 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양측의 요구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 은 물론 경제통합 등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용역 후 6개월간 논의,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방침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법, 제도 정비를 위한 실시계 획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 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향후 용역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용역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용역에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경제협력공동체, 현상황 유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여러 대안의 장단점, 기대 효과, 방식, 시기, 시·도민 여론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통합 연구용역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광주전 남연구원이 맡는다. 시·도는 각각 잠정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광주전남연구원에 행정통합 용 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연구원 안팎에서 연구기획 단 10여명, 시·도가 추천한 20명 안팎의 연구자문 단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용역에서는 통합의 타당성, 국내외 사례, 통합 방식별 장단점, 시·도민 의견 조사와 공론화 방법 등을 연구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을 논의하기로 지난달 2일 합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주시,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5개팀 10명 선정

광주시는 "올해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한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고 규제개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5개팀 10명의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5개 우수사례는 ▲시민불편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이한민, 권도현) ▲광주형 난임부부 확대지원책 마련(송정태, 윤서경)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정미경, 곽명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평동3차 산단 규제완화(김훈,이상철) ▲환경영향평가 통합실시로 소요기간을 단축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신, 서명하) 등이다.

2020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5개 팀 10명의 우수공무원은 인사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1~2위팀에게는 광주시장상도 수여된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일방 적인 규제완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 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 정"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나 비효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산하 공공기관, 강도 높은 혁신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혁 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속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보면 기대 수

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세상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기관장이나 임직원들의 혁신 의지가 크 게 부족하고 기존 관행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본청 실·국의 관리·감독도 미흡하고 구태의연하 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30층 건물 21개 동 불구 70m이상 소방 사다리차 전무 김기성 도의원 주장

전남지역에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21개 동이 있으나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이 가능한 70m 이상 소방 사다리차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성 (더불어민주당·담양2) 의원이확보한 자료에 따르 면 전남지역에는 30층 이상 건축물이 목포, 순천, 나주, 광양 등 7개소에 21개 동 있다.

그러나 도내 소방사다리자는 최고 높이 53m 소 방사다리차 11대를 포함해 총 27대가 전부여서 30층 이상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불 보 듯 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울산시 남구 33층 주 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른 속도로 고층으로 번졌으나, 소방 관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 전남도 고층건물 화재발생에 대비 해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배출가스 5등급 11만 6632대 전남도, 20일까지 모의 단속

전남도는 오는 20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3 만1661대로, 단속 제외차량(장애인차, 국가유공 자,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만529대를 제외한 11만6632대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 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 및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동시 시행 된다.

전남도는 도내 36개 지점에 설치된 52대의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 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 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에 카메라 50대를 추가설치, 홍보기간 및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 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및 조 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